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 자기검증 등 홈택스 편의 강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 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 '부의 세습'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기업 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기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기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의무 위반 시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최근 5년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매년 평균 약 11.8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의무 위반으로 추징 금액(201.6억원)이 2022년(78.6억원)에 비해 두 배 넘게 넘겼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더 큰 기업상속공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 손실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기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라며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 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